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밝혀야”

유성엽 교문위원장,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한계 있어… 국정감사에서 배후 확인해야”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 정읍·고창)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서 조작 혐의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유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단의 이번 조사결과를 환영한다면서, “당시 조작 혐의에 대해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하고 진상요구 했음에도, 2년이 지난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진상이 밝혀지는 이런 작태가 다시는 반복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국정화 의견서가 조작된 혐의가 발견되었으나, 당시 4만여장을 차례기로 접수하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미리 알고 대비한 경위와 구체적으로 검수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시 대기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누구를 통해 찬성 의견서 도착을 사전에 연락 받았는지와 의견서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 및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면 배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교육부의 조직적 협조와 은폐 혐의를 확인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시민단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청와대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조작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세월호 상황보고 설명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야 “軍이 법원 해킹… 이게 국가냐”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법원 전산망을 해킹했다는 의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2일 열린 국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실이라면 중대 범죄를 넘어서 국가를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2011년 이후 법원 전산망에 대한 해킹 시도 및 성공 여부, 해커 추적 현황에 대해 파악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댓글 공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4년 국군 사이버사가 법원 등에 대한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같은 해 국가정보원이 유관기관 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묘하게도 온갖 나쁜 짓을 자행한 MB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사이버사의 불법을 잡아낸 것”이라며 “소도둑이 돼지도둑을 잡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이버사 해킹으로 어떤 정보가 뚫렸는지 정확한 피해 실태를 확인해달라”며 “왜 법원은 확인 못했는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법계 의원은 질의 시간을 통해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대법원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사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관련 분야에 지식이 있는 강민구 법원도서관장은 “우리 전산망은 내부망으로 독립돼 있어서 외부 해킹이 성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시스

“천안~논산 고속도 통행료 인하를” 화생방 방호시설, 접경지역 4곳이 전부

안호영 의원, “인상 억제하는 법적 근거 규정 마련해야”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대해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안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12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 고속도로(81km) 통행료가 비슷한 거리의 민자도로인 상주~영천 고속도로(93.9km)보다 2,700원 비싸다”고 지적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의 통행료 인하 요구가 많다.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위해 민자고속도로 사업자의 높은 비용구조를 절감하는 ‘자금 재조달’이나 사업 재구조화 등 여러 방안들이 논의 중에 있고, 이미 국토부에서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다는 연구용역을 올해 5월에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민자법인도 올해 6월에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통행료 경감 방안 연구 용역 추진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이번에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측의 연구용역 추진을 통행료 인하로 받

아들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안호영 의원은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제출한 연구용역 계획서를 보면 통행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사업 재구조화, 관리운영기간 연장, 국고보조금 확대, 세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 등을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하고 있어 결국 통행료를 인하하고, 재정보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의 비싼 통행료와 과다한 재정지원은 매년 지적되어 왔다. 이에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호영 의원은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과도한 재정지원이나 고이율의 후순위채 발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부가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이용호 의원, “정부가 국민 생존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전쟁, 재난 등 비상시 대피시설이 일원화 되어 있지 않아 긴급상황에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재 마련된 대피시설 중 화생방 방호성을 갖춘 곳은 접경지역에 설치된 4곳에 불과하다.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 임실 순창)이 1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시 대피시설 중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 외 시설은 방호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대피시설은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화생방용 주민대피시설, 공공용시설이다. 이 중 공공용 시설은 정부, 지자체 및 공공단체 소유시설과 민간소유시설로 구성된다. 이 중 접경지역 내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10m 내외에서 500lbs(파운드)의 폭탄이 터져도 방호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그 공공용 시설은 폭탄 파편을 막을 수만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다. 공공용 시설이 재래식 폭탄을 방어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다.

북한이 보유한 핵과 생화학 무기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의 대피시설로는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화생방 대피시설은 개소당 20억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이다. 단계적으로라도 화생방 방호시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더 있다.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에는 필수비상용품 비치 의무가 있으나, 공공용 시설에는 1의무가 없다. 비상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로 대피한 주민들은 비상용품을 구할 수 있으나, 공공용 시설은 잠시 몸을 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실상가상으로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예산 부족으로 민방위대원수 대비 방독면 숫자조차 부족하다. 이용호 의원은 “방독면은 전쟁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민간의 개인방독면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대피소별 운영기준을 일원화하고, 국민들의 생존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정정부 5대 복지공약에 지자체 부담 5년 25.9조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복지공약 사업인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법정’의 공약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5년간 25조 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예방접종 사업에 총 106조 6,905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중 중앙정부가 80조 7,282억원(75.6%), 지방자치단체가 25조 9,623억원(24.4%)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5대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정지출이 40% 이상되는 전남(26.2%), 전북(28.6%), 강원(29.0%), 경북(32.6%), 충북(38.1%), 충남(39.2%), 제주(39.5%) 등의 지역은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5대 복지사업 비용을 추계해 본 결과 5년 간(2018년~2022년) 아동수당 13조 3,610억원, 기초연금 81조 7,637억원, 장애인연금 5조 1,586억원, 예방접종확대 4,088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5조 9,983억원 등 총 106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아동수당 3조 7,729억원, △기초연금 19조 774억원, △장애인연금 1조 7,023억원, △예방접종확대 2,207억원, △기초생활보장제도 1조 1,889억원 등 25조 9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복지확대 정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긴다면 결국 지자체들의 재정은 파탄으로 내몰려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성 기자

제28회 정읍시 문화제

백제가요

천년의 기다림
가요와 사랑으로
물들다

2017.10.20(금) ~ 10.22(일) 3일간

정읍사공원 및 시내일원

주최 | 주관 정읍시 | 후원 | 정읍사문화재단

<p>10.19(목) 18:00~21:00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p> <p>전야제 “달빛가요 SHOW” 송대관, 문희옥, 오로라, 동이문, DOZ, 김아라, 진정아</p>	<p>10.20(금) 16:30~18:00 정읍사공원~정읍사공원</p> <p>정읍사 거리 퍼레이드 공군군악대, 꽃마차, 퍼포먼스팀</p>
<p>10.20(금) 18:00~22:00 정읍사공원 특별무대</p> <p>정읍사 열린음악회 홍진영, 박현빈, 오마이걸, 온앤오프, 이진관, 케이디 티</p>	<p>10.21(토) 16:00~18:00 정읍사공원 특별무대</p> <p>정읍사 K-POP 페스티벌 청소년 Rock Band 한미당전치 -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p>
<p>10.21(토) 18:30~20:30 정읍사공원 특별무대</p> <p>정읍사 가요제 장윤정, 진 성, 솔 티, 이동준</p>	<p>10.22(일) 19:00~21:00 정읍사공원 특별무대</p> <p>제회 정읍사 Maple star 오디션 울랄라세션, 배기성, 서재이</p>

* 백제가요 정읍사 오솔길 길기 행사 10. 21(토) 09:00~12:00 정읍사공원

| 2017년도 정읍시 정읍사문화제행사 보조금으로 제작